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 구축” ‘국민 건강 지키는 녹색미래 3법’

도의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새만금 투자 촉구... “새만금이 최적의 해법”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 새만금 투자를 촉구하며 “새만금을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로 만들자”는 구상을 내놔다.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등 도의원 14명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들어섰다”며 “새만금이 아מת로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선 수도권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아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 조성이 어렵고, 최대 16GW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가 수도권 전력망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고압 송전선 건설에 따른 주민 반발, 경관 훼손, 지역 불평등 심화 등의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만금은 전혀 다른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은 이미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 내에서는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발전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 5GW까지 포함하면 최소 17GW 규모의 재생에너지원 확보가 가능하다. 의원들은 “수소 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 등 도의원 14명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로 만들자는 구상을 내놔다.

치(ESS)와의 결합을 통해 RE100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의 장점은 에너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활한 부지를 바탕으로 생산시설, 연구개발, 교육,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형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결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도 구축되고 있다.

도의회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허브를 건설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정부의 역할도 강하게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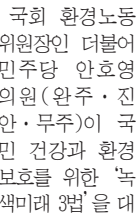
구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며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단을 미룬다면 수도권 집중 심화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이중 위기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RE100 가입 기업”이라며 “새만금 투자를 통해 RE100을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도의회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에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를 구축할 것 △삼성, SK 등 반도체 기업들은 새만금 투자를 통해 RE100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 △새만금 투자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반도체 생태계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 등이 그것이다.

끝으로 “새만금 투자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동시에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며 “지금 이아מת로 과감한 결단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생태계 보전 등 중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국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한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생태계 보전 △자원 순환 △석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세 가지다. 그는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먼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복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판

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포장기준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 개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과대포장 문제를 줄이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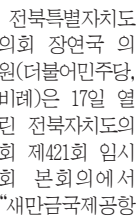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2009년 석면 사용 전면 금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건축물 관리 미흡 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추진 정상화돼야”

장영국 도의원, 정부에 “항소심서 필요·정당성 입증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영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은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장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잔혹한 선고”와 다음을 강조했다. “국가가 수 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을 믿고 지난 30여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전북자치도민이 걸어온 길은 끝없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거대한 비전이 제시될 때마다 전북자치도민들은 가슴 벅찬

희망을 품었지만, 계획은 번번이 축소되고 지연되었으며, 약속된 개발은 미루어지지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멸종까지 거론될 정도의 폐해를 낳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이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거점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이 좌초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게 장의원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시혜적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전북도민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약속이자 의무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반드시 항소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2026년, 한반도 평화의 해로” |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이재명 정부 평화공존 전략 주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통일부장관 겸임)이 대표를 맡은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평화공존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평화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강대국 중심 각축이 치열해지는 다극화 시대에 평화는 생존과 발전의 기본 전제”라며, “지금은 ‘평화의 시간’이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평화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남북 평화공존체제 구축은 더 이상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평화공존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한국은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

우고, 선제적 평화조치와 신뢰구축을 통해 군비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변경 등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복원은 ‘국가 대 국가 관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 관계에서 위기 관리·신뢰구축 중심의 동태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핵전략 역시 ‘핵불용’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림 전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러·중 관계를 상수로 보고, 대북·대러 전략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포럼 책임연구원은 “포럼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비 지원” “가뭄대책 점검·선제 대응 필요”

고령친화도시 준비 수준 점검·실질적 정책 추진 촉구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17일 열린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강태창 의원(군산1)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3자녀 이상 또는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장착해야 하는 가정에 SUV나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전북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가칭 ‘돌봄정책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 1)은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을

의 확대를 촉구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의 고령친화도시 준비 수준을 강하게 점검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새만

금 신공항은 안전성·경제성·환경성 어느 하나 충족하지 못한다. 더 이상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항소를 즉각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특혜와 편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전북 인력양성사업 전반에 대

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기후위기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전북자치도의 가뭄대책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강태창 의원



김정수 의원



이병도 의원



윤영숙 의원



김명지 의원



오현숙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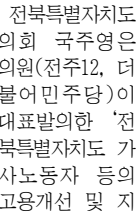
김대중 의원



김희수 의원

도내 가사노동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 ‘첫 발’

국주영은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인증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나 미인증 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당수 가사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해 제도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환경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고용 상담과 권익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노동인권 보호와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국주영은 의원은 “가사노동은 가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도민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사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